

지역 조직화로 민민운 강화



지역시민운동과 부문운동은 통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진: 김>

현재 시민운동은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크게 부진하고 있다. 이론적 측면은 동구 독재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시민과 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즉 시민운동의 성격규정에 있어 기존의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비판과 이에 대한 비판과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히려 '학살단체협의회' 정기세미나에서는 시민운동론이 토론주제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론정립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전국연합 대회대회에서는 남부지방 기조를 정립한 '한 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선포하였다. 시민운동에 대한 연합의 입장을 놓고 토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 양면의 시민운동에 대한 토론과정을 지지할 뿐 아니라 중요한 점이 노후되었다.

민중운동을 강화시키는 역할

첫째로, 기존의 민중운동론의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비판한 이론의 논리전개를 살펴 볼 때 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물론 민중운동론의 발전은 민중운동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민중운동론의 발전은 민중운동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민중운동론의 발전은 민중운동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둘째로, 기존의 민중운동론의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비판한 이론의 논리전개를 살펴 볼 때 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물론 민중운동론의 발전은 민중운동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민중운동론의 발전은 민중운동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전보적 시민운동의 큰 그림자는 분명하며 실천적 의의도 정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 전략을 함께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민중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할 사회적 문제점들이

시민운동이 가야 할 길 ③

글순서

1. 남한 시민운동의 역사와 사상의 배경
2. 정성현의 시민운동 고찰
3. 시민운동이 나아갈 길

산책에 있다. 예를 들면 주택문제, 환경·공해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에서부터 정치개혁문제, 지역개발문제, 이외에도 여성·아동·노인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생산관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일반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기반 민중이익 대변

정치적 전망 분명히

부문·지역 시민운동 조화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은 피해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때 풀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민들의 자주적인 대안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보적 시민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개선운동에서부터 정치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전보적인 운동역량은 자신들의 기반을 확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향후 전보적 시민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첫째, 전보적 시민운동은 지역을 기초로 노동자, 빈민, 농민, 중산층 등 민중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선적 운동형태를 가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협소한 단위 사업장을 벗어나 지역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면의 노동운동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해고노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이 정치권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지금 민주조세체들이 시민운동을 방기할 이유가 없다. 민주조세체들이 지역의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할 때 시민운동 또한 진정한 건강성과 진보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수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낼 수 있다.

부문운동과 지역시민운동

연대필요

둘째, 부문운동과 지역 시민운동의 통일적인 사업전행과 사안에 따른 과감한 연대여가 필요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전보적 시민운동의 가능성은 무궁하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현재 정국에서는 전보적 시민운동은 부문과 지역이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즉 부문운동은 상당히 발달해 있으나 이를 전체 서울 지역 시민운동으로 전환시키려는 데에는 미흡하

다. 일례를 들어 보자.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서울지역의 부문, 지역 단체들이 통일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과다한 영향력을 대안할 것이다. 또 그간 축적된 부문운동의 전문적 역량은 이 운동을 전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낮은 차원의 생활운동으로 농성을 치거나 장터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문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통일적으로 행사를 치루어 낸다면 지리적 장터 같은 생활운동은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차원의 생활운동에 대학이 중심이 되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때 답답한 것은 느낀다.

민중운동의 커다란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 사업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서울지역 운동의 상황은 바로 부문과 지역단체들의 통일적인 사업전행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은 분명한 정치적 전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95년 단체장 선거를 앞둔 지금 지역과 부문의 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은 각자의 분야를 개발하여 정책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척적이고 대중적인 정치세력으로의 대안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시민운동은 자신들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전보적 시민운동이 나란 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제 전보적 시민운동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한 소극적인 논쟁은 민중운동정당에서 사려해야 한다. 지금 민중운동정당에서 지금이 요청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해고노사를 장악하여 보수의 시민운동을 피진시키는 것이다.

이 교 정

(동우천 민주사회 의장)

그때 그사건3

금강산담과 애학투런

분단 후 48년 동안 가장 효과적인 통치이데올로기는 '반공'이었다. 정권은 입법적으로 '북괴', '남침', '북의 사주', '후방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여기에 물인 때마디 '북괴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85년 개헌요구가 들어 오를 때 발표된 '금강산 담', 87년 대선 직전의 'KAL기 폭파', 89년 대선 전에 생긴 '남부당 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중 금강산담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안기부가 조직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강산 담이 시국전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당시 그로써 인해 희생되었던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86년 안기부가 금강산담에 대해 발표한 당시 정국은 그때 초부 터 시작된 '최선에 개입 투쟁'이 정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9월 11일, 신민당에서 추진한 '개헌추진위원회'를 사흘간 결성대회'를 시발로 해서 '5.3 인권투쟁'으로 '반미'와 '반독재'에 대한 민중들의 뜻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에 미국과 서독들 정권은 위기 모면식의 대외개선을 추진하면서 민주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한다. 이 탄압을 가려는 연방정치가 바로 금강산 담이었다.

위기정국 돌파카드 '반공'

'금강산 담' 발표후 유혈전압·1천2백여명 구속

1986년 10월 28일 1시, 건국대에서 전국 29개 대학 학생 2천여 명이 '전국 반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위원회(이하 애학투련)'를 결성하는 데 합의했다.



3시 20분경부터 1천 5백여명의 경찰들이 최후방을 쏘며 밀려들었고, 학생들은 각 건물로 피신해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나흘간 단수, 단전, 단전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을 전국대 안에 가두어 놓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산 담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소양강댐보다 10배나 큰 규모인, 저수량 2백여만톤의 댐을 2년안에 건설해서 88올림픽을 전후에 수확하며 쓰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울이 3년의 이나 잠겨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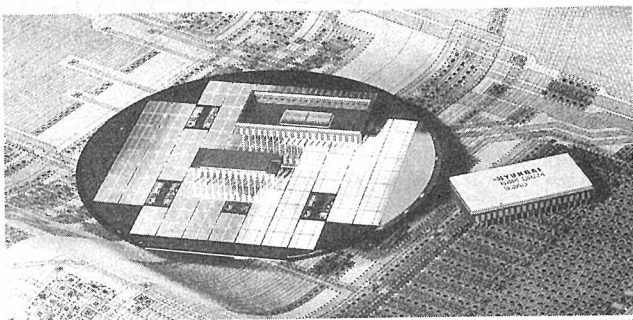
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기부가 금강산담의 최대 저수량이 70여 만톤이라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2백여만톤으로 늘리라고 했으며, 평화의 댐 건설을 발표·연정년 성급을 모집하였다.

건설기간이 2년도 여적지 않은 것으로, 금강산에서 1백 50여 톤 규모의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17년이 걸려서야 완공되는 데 불과 2년만에 건설하여 곧 저력이 될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전국대에 관한 학생들은 '친북공 공산혁명분자'로 모는 것과 함께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엄청난 시기극을 터뜨려 놓고는, 바로 다음날인 31일 경향은 대대적인 집회연락에 들어갔다. 작전 이름 '황소 31 일제'였다. 황소의 소양강호수까지 동원하여 최후방, 최후방, 최후방을 난부하며 광기어린 유혈전압을 한 것이다.

이른바 '건대 애학투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다. 이날 하루 1천 5백 25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그 중 1천 2백 99명이 구속되었다. 당일 사건 구속자수포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다. 금강산담을 이용한 공포분위기가 속에서 계속하여 '운동권'을 잡아들이는 조직사건을 낚아채면서 '운동권 씨발사건'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금강산 담' 투쟁의 동요를 열거하는 학생운동의 강인함을, 지금과 같은 폭 전선은 밝혀 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의의도 남겼다. (사회부)

다음호에는 '통일민주당 창당 빌려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기술의現代 세계의現代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 현대는 변화하는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며 '기술의現代, 세계의現代'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파급한 경영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意識改革

사회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현대는 31기 변화상을 타파하여 대안성으로 우리의 국가적인 화상 근무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고 근간합의 기업 문화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尖端技術開發

첨단기술 개발로 무가치로 높은 효율성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갑니다. 현대는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에서 무공해자동차, LNH, GMD 등 반도체의 개발성과를 올리며 지금도 17개사, 28개 연구소의 5천여 연구원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精誠과 品質

세월을 누릴 품질경영을 - 그것은 만능의 열쇠로 최선의 대안은 정성에서 일관성으로 신뢰로 전진수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수율을 2배로 늘린 수 있습니다. 현대는 품질을 줄이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하나를 최선으로 대외에 대외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輸出增大

자국보다 우월한 시장 경쟁력 - 현대는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에 일관성으로 전진수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18만 원(1인당)을 넘어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신장제 전진수를 더욱 높였습니다.



◇제17차 모의유엔총회 내용정리

급변화된 세계속의 UN 제구실 찾기

선진국 대변인 탈피 · 힘의 균형 이룩 제3세계 상임이사국 진출 필요

급변하는 오늘날의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연합(UN)은 세계평화를 위한 위상의 재정립과 역할의 재인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21세기 유엔의 역할과 평화가능성'이란 주제로 지난 2일(화) 오후 6시부터 한국교회 1백주년 기념관에서 제17차 모의 유엔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남북간의 냉전의 다극화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엔의 역할변화의 필요성과 그것을 위해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1959년 '유엔 건국문헌'에 따르면 1차총회를 가지며 시작했던 모의 유엔 총회는 상황상장마다 세계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정해 거의 매년 총회를 개최해왔다. 유엔 총회라는 독특한 형식을 도입해 각 나라별로 발언을 하는 특징을 가지는 모의유엔 총회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공부하는 본교의 특색을 잘 살린 최대의 학술행사로 뽑히고 있다.

이번 총회의 형식은 사무총장의 의제제안으로 시작해 17개국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고 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내용은 크게 현재 국제정세의 원인과 나라는 문제점들의 분석, 21세기 유엔의 역할과 평화가능성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로 나누어졌다.

위 내용에 의하면 현재 세계정세의 변화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미·소 양대국간의 긴장완화와 동구권의 몰락, 지역간의 경제협력의 강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으로 강대국간의 권력적인 경쟁위험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민족·종교·경제적 이익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각 국가들의 준비

정상으로 지역분쟁의 위험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들의 경제불황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약소국들의 주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짙어짐으로써 남·북대립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해 유엔의 문제점과 극복과제는 크게 평화유지활동과 유엔 체계개선문제의 두가지로 이어져 내려갔다.

캐나다를 "인종간의 분쟁, 내전이 세계평화와 안정의 제1위협요소"라고 말하고 "지역분쟁 타결이 세계평화와 유엔의 존속과 존엄을 강요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제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각 국가들의 준비

정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무엇보다도 대화에 의한 해결방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적 집단안보체제의 강화에 찬성하였다.

북한은 "경제불황과 함께 의한 남·북 불평등을 해소하기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지역단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역안보체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강점이 됐던 것은 독일과 일본의 안전보장이사 상임이사국 가입문제와 관련한 안보의 체계개선 문제였다.

나이지리아와 북한은 "상임이사국의 지역안보에 대한 고려가 지니고 있어 서방 일부국가들의 의견만 대변해줄 수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며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되길 촉구했다. 또 말리비아는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행사의 권한을 유엔 신뢰국가인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대립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독일과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통해 현재 유엔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시키고 강화를 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가시성을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인도는 "온 인류가 힘의 불균형을 미해결로 남겨둔 채 유엔의 기능을 유용하고 조화롭게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독일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세계가 도저히 선진국들 국가에 의해 움직여 질수 있다는 명목으로 반대했다. 또 인도는 해결방안으로 "제3세계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제시된 유엔의 과제로는 탈냉전 이후 세계의 역량을 인류공영 · 공존을 위한 환경, 노동, 인권 문제의 과감한 추진으로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환경영 문제,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는 난민문제, 마약문제 등이 함께 해결해야 할 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동사방전의 종식과 함께 유엔은 취학 및 주변 제국의 사회통합 추진, 빈곤해소와 완화, 인종차별의 방지, 사회적 응집력 강화와 동 사회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의문 낭독에서 유엔은 "현재 여러 문제점을 위한 유엔활동이 세계각국의 이익관계 대립과 재정난 등으로 효과를 거두어 못했다"고 결론짓고 5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1세기를 위한 헌장개정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유지활동강화 △유엔기구의 효율화를 위한 총회와 사무총장 역할강화 △재정난 해소를 위한 노력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예방외교 노력.

이번 제17차 모의유엔 총회는 국제적 상황에 따른 각 국가의 이해를 잘 반영하고 유엔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대학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발언한 한 학생의 지적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고민과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김민호 기자)



이번 모의유엔총회에서는 UN의역할과 평화기능에 대해 17개 국가대표가 발언했다.

학/술/단/신

주한EC대사 강연회를

통해 본 우리의 과제

80년대 후반부터 냉전체계의 붕괴로 정치·경제·문화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각국간에는 인종·국가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유전·복합·동아시아의 3대 경제권으로 다극화되는 양상이 조망되고 있으며 경제적 지역화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통합과정과 이로 인한 국가간의 이익은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교 대학원 석·박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일(화) 오후 4시 대학

원에서 임정환에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EC의 주한대사 길로스 아노이(Gillos Anouh) 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아노이씨는 "유럽경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1월 1일 발효됨으로써 EC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강연의 시작과정을 강조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시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왔던 화폐와 정치부문의 통합을 위해 91년 12월에 인준됐는데, 아노이씨는 조약의 발효가 가지는 의미를 유럽경제와 화폐 공동체 형성 △4대 경제요소(상품, 자본, 인력, 서비스)의 상호확대 △자유무역 지역 안보정체 강화 △국제대행 내부부 부분에서의 협력가능 등의 4가지로 설명했다. 특히 아노이씨는 "유럽경제 회계공동체 형성은 북미의 NAFTA나 동아시아의 APEC과 EC를 구분짓는 지

표라고 강조하고 "이 조약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사회지는 "EC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EC와의 관계, APEC의 전망,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까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연회의 의의를 밝혔다.

경인사관 학술 심포지움 아주대에서 열려

'고조선의 위기에 관한 남북의 견해'에 대한 학술심포지움이 경기·인천지역 사학과 연합(이하 경인사관) 주최로 지난 5일(금) 오후 2시 아주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경인사관 학술심포지움은 본교와 수원지역에 있는 아주대, 성심대, 경희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아직까지 정경의 내러지적 않아 다양한 학설이 거론되는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에

관하여 논의 되었다.

특히 북한학파가 주장하는 요동 중심설을 살펴본 후 하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를 밝혔다.

재관적인 시작으로 다양한 사료를 검토하여 남북의 제한된 지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언어학과 학회 '도토리' 공개토론회 열려

용인대학교 언어학의 종합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주 월요일부터 주요 열거가 열렸다.

이 기간중 언어학과 학회 '도토리'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인문대 404호에서 '신세대 대학학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도토리'에서는 공개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세대'라고 생각하느냐 '정제'에 대한

관심도 등의 설문조사를 했다.

토론은 "정치", "통일", "선배배 관계" '대학의 의미' 등 주제별로 진행했는데 중간에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황극도 준비했다고 한다.

제4회 외국국무회의 실명제문제 다룰 예정

오는 11월(목) 오후 6시 대학원 104호에서는 '1995. 유엔평화회의 제4회 이문평화회의'의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행정학과 학생회는 처음 실시할 때의 의도를 벗어나고 있는 실명제 문제점을 찾아 비판하고 대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고칠>
615호 인문대 학예회 기사 중 '리모'를 '리모'로 바로 잡습니다.

이 책

유년히 역사학의 동경이 많은 때이다. 혹자는 사학이 혼란하고 사상의 중심이 흔들릴 때일수록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한다. '과연 사상이 혼란하는 시기인가'에 대한 물음은 유보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해방, 분단, 전쟁, 반공독재, 4·19, 5·16, 유신, 광주, 87년 6월항쟁, 3당합당, 그리고 문민정부... 50여년의 한국현대사는 그야말로 숭가쁜 행로를 거듭했다. 잠시도 쉬지않고 계속되는 '반역사적'사건들은 민중을 깨어나게 했고 그 거대한 벽에 부딪쳐 싸우게 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가들의 적적한(?) 선택과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E·H 카의 말을 구지 다시 꺼내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워온 현대사가 '해방'과 '분단'의 집대성임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왜곡된 역사의 바로잡기 움직임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바로보는 우리역사'등의 출판을 얻어



객관성에 바탕둔 현대사 평가서

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현대사 역시 왜곡된 역사를 바로하고 재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성향을 띠지는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한 문제점이 아예 한국정치연구회는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독후)를 펴냈다.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다가가 수 있도록 중요한 73가지의 사건을 통해 현대사를 이해하게 했다. 가급적 주관적 판단과 단편적 평가를 배제하고 '반전의'를 독자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진보적 역사서와 차별성을 보인다.

모두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방직후로부터 92년 대선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전체는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신장파문제, 9월항쟁 등 해방정국기의 사건을, △제2부는 38선분쟁, 개성도 포로수용소 폭동사건 등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서술했다. △제3부는 진보당사건과 4·19혁명, 반공독재와 민중의 저항을, △제4부와 제5부는 산업화,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박정희 정권시기의 사건들을, △제6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민주화운동 등 제2공화국과 이후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제7부는 68학국의 주요 사건들로 구성 되었다.

특히 이적까지 미치도록 남아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87년 대선과 김영삼의 3당합당, 통일국 민당의 창당, 그리고 92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를 자세히 서술해 68학국의 조상조상 평가를 단정한다. 제도권 안이나 68학기 진국민주운동(진민연)의 정세이나 92년 68학기, 91년 5월광주평화 운동(진민연)의 활동도 그 성과와 오류를 서술해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돕는다.

사건별 구성과 객관적 관점으로 소모임의 세미나 교재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건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옥선 기자>

계절전복제

·소울상자

계절전복제란 계절에 따라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번갈아가며 계절전복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신장파제도에 계절전복제를 도입하여 단정기(수확기)부터, 빨강을 가장 비싸게 팔을 수 있을 때까지는 7%까지 인상하라고 했지만(여름에는 5%)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추수에서 팔을 가장 비싸게 팔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추수 바로 직후에 팔을 보면 가격이 수확기보다 7%를 더 받는다 해도, 수매에 바로 팔아 시중가격이 평균 10.5%인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더 이익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편적, 감도분(보통 손실인 약)까지 감안한다면 변동율이 최소 15%는 되어 민간금융이 가능한 실질적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에서 디트로이트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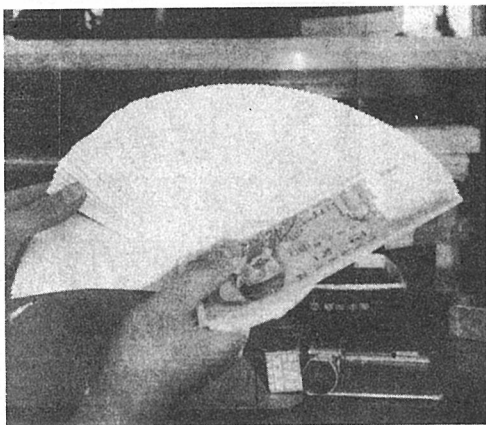


"그곳에선 세계 자동차들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디트로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들과 당당하게 겨루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랑스런 모습까지도 세계적 자동차들의 수를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실어준 세계 3대 모터쇼!

높은 급여, 복리후생 다 좋지만 큰 회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부가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멋진 기회였습니다. 입사 3년차의 사원에게 이런 기회와 도전의 여력을 불러 일으키게 해준 나의 회사, 현대자동차.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미국의 통신 인력이 강제하면서 금융시장 개방의 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더 커진 가능성이 있다.

□ 금융시장 개방의 문제점

우려되는 국부 유출

정치·경제 불안, 자본이탈 초래 우려 금융기관의 체질 개선 추진돼야

최근 미국 재무차관보가 '제3단계 금융시장 개방 계획'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89년 미국과의 금융분야 정상 비준 협정에 의해 한미 금융정책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금융시장 개방론자들은 "자유화와 개방은 금융개혁의 동반자이다.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의 국제화가 도모되고, 금융·자본시장의 규모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치 및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경우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로 급변하는 환율이 경제적인 때 자금의 유출입이 커서 통화관리와 금융시장 및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과 선진 금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금이 들어와 미국에 이자 수입 및 자본 이득을 획득할 때 해외 송금하는 경우 상당량의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개방은 크게 금융거래의 개방과 금융산업의 개방으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거래의 개방은 외화 지급과 외화 지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외화지급과 외화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2년 9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후의 기대감이 있는 모든 기업

으로 원화되는 등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순수 외화입이 원화되었고 환율의 하루 변동폭도 상하 1%로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졌다.

한편 자본 자유화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증권시장 개방이다. 주식시장이 92년에 개방되어 해외로부터 많은 양의 주식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93년 중 해외로부터의 주식투자자 자금 유입은 연간 50억달러 규모로 단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주식 가격을 상승시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의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고 통화환율을 평가절상시키는 악력으로 작용하여 수출회복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증권시장의 추가개방이 문제되는데 외국인 주식투자의 허용한도 확대와 채권시장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통상안력이 강제되면서 금융시장 개방의 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더 커진 가능성이 있다. 주권회복이 가시화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커져 시장개방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다소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금융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기반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금리자유화의 조속한 추진, 협정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 해결,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임 송 하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원

북한 핵과 남북 관계

지난 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돈 북사교한 실무 접촉을 북한측이 거부하고, 한·미 연례 안보회의의 회의를 통해서도 협상과정에 혼란을 초래한 유보, 핵문제 공동대응 등의 결정이 이뤄졌다.

91년부터 제기된 북의 핵문제에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은 듯 하다.

북의 핵문제에 있어서 남한 당국자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과 변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일뿐 아니라 정전협정에 조인한 북한의 실질적 적대국이 때문이다.

북의 핵문제는 91년 미국이 제안한 협정 서명과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수용, 영변 미화인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 등의 압력을 가하러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 간의 회담에서 서명하기 전인 지난 91년도는 '핵안정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핵개발 의혹의 '유일한 근거'였다.

92년 1월 핵안정 협정에 북한이 서명하고, 사찰을 수락함으로써 '유일한 근거'는 사라지고 평화무드가 정착되는 듯 했다.

실제로 92년 5월부터 93년 2월까지 6차례의 사찰이 이루어졌고 사찰결과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핵무기 개발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계이며, 미국의 주장은 일부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사찰 결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특별사찰을 93년 2월 국제 원자

특사교환 거부 '항의성 충고'

남북대화 핵심열쇠, 핵문제 선투입 강경론의 대두 경계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북·미 3차 회담의 전망은 밝다.

력 기구의 결의로 채택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 북한측 강경주의 교부 부부장은 "미지를 비호하고 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다시금 핵문제 해결이 정색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굳이 중국 베이징에서 하위급 외교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7월 19일에는 강경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강주치 미국 국무차관보의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의 이번 특사교환 실무접촉의 거부태세를 갖기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 표현된 국제공동체제의 포기를 전제로 한, 대국의 이익에 맞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으리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권영해 국방장관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정전위협에 대한 강경한 시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핵공방이 시작되면서부터 주장해 온 디스퍼트 혼란의 중단이 유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으므로 이에 대

한 항의의 표시로 거부를 표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특사교환 실무접촉 거부부는 남북대화에서 '전면적 파괴'가 아닌 비극과 남한 정부에 대한 '항의성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에도 화인했듯이 남북 대화의 핵심 열쇠는 핵문제이다.

핵문제가 어떻게 어느 시기에 타결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냉각기에 휩싸이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기의 문제는 11월 20일을

전후해서 진행될 북·미 고위급 회담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지나가야 가늠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현재 한 군에서 대한 전담을 목표로 단행했던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했고 이는 최근 있었던 3개의 지지주 선거에서 패배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도 여러급 실무회담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잠금장치가 된 것이다.

한편 북한도 임시사찰은 불하한다는 예초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나 3개의 핵시설에 대한 통상사찰과 4개 사찰에 대한 임시사찰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분단조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죄이다.

민족대단결의 입장에서 핵문제가 완결이 해결된다면 남북 대화의 전망은 밝다.

선부는 강경론의 대두를 경계해야 한 것임이 화해와 평화정착의 노력으로 디스퍼트 혼란의 종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 평화정착의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남북과 북이 합심할 때 통일의 날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박 광 우

<민주인론운동협의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 윤영규

"합의서 실천과 비핵화 공동선언에 충실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회담을 거부했

다는데

—남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남북합의에서 명시된 핵

문제 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

런데 북한의 핵문제를 주제로

로 풀지 못하고 미국이 전권

을 위두드로도 방치해두었다.

핵문제를 UN이나 IAEA로 끌

고가 국제적 압력을 넣는 포습

을 북한이 바람직하게 받아들이

일 수는 없는 것이다.

—북·미 3차 회담의 전망은

—북한은 강수행 원자력에

대한 기술자원을 요구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포기의 확신을 미

국에게 주고 있고 조·미 수교

를 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

한의 핵무기성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가 맞물

리는 지점에서 적당한 타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공방 과정에서 남한 당

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

는가

—이념과 체제보다 민족애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합의서

실천과 비핵화 공동선언'을 충

실히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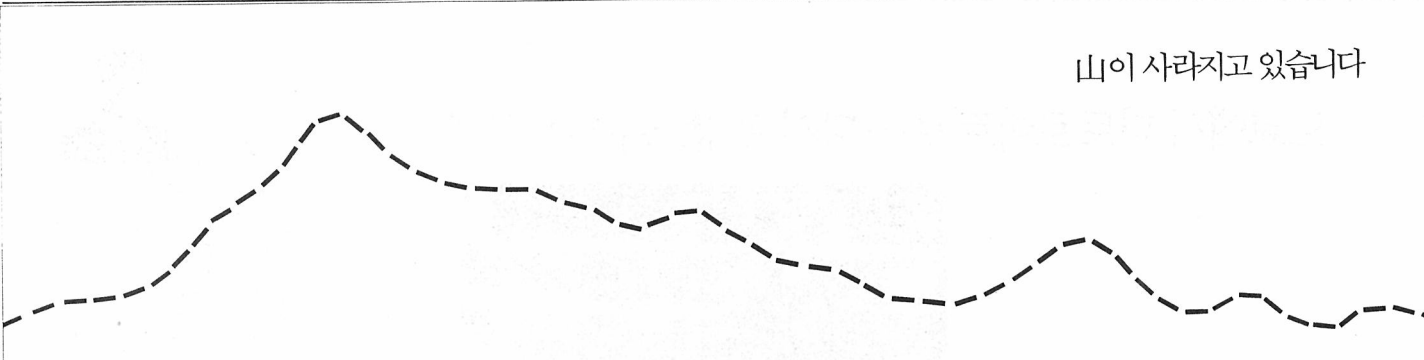
—학생들의 자주교류 사업이

거의 차인되고 있는데

= '핵문제 우선 원칙'으로 쉽



김종중 기자



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파의 흐름을 막는 산이라는 장벽 - 한국이동통신이 기술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산도 많고 강도 많은 우리나라 -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지형에서의 이동통신은 선진국의 경험도 별 도움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산에 가로막혀 가닿지 못하는 - 한국이동통신 012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이동통신 기술로 전국 어디서나 가동된, 자유로운 무선호출을 서비스해 나가고 있습니다.

012
한국이동통신

△

